



# 국제표준화 동향과 우리의 대책(상)

김 남 하

대한전기협회 법령연구실 전문위원

## 1. 머리말

소련연방의 붕괴에 따른 국가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식과, 독일의 통일로 세계의 무역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제무역환경이 국경 없는 시장(Borderless Market)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유럽의 시장 통합에서 비롯된 지역경제의 블록화와 연동하여 미래 경제활동의 골격은 세계 단일 시장화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국제표준의 역할 증대로 인한 각국의 국가표준정책의 변화이다. 1995년에 발효된 WTO/TBT 협정이 각국의 표준화 정책을 개혁하여야 할 빌미를 제공하였다. 선진국에 이에 뒤질세라 자국의 무역환경이 국제 우위에 설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더 많이 채택되게 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는 선진국의 최근 표준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상을 소개하여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길잡이가 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2. 개요

「ISO 9000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해외사업의 기본 요건이다」라고 하는 기업이 많다. 반면에 「그러한 자격

증을 취득하여도 자사의 품도에 맞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못 한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ISO 9000 자격증과 매뉴얼이 그 기업을 위하여 유용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업의 경영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실제로 제품의 품질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품관리를 국제수준으로 격상을 시키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각오가 확고하게 실행될 때에 그 자격증과 매뉴얼은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경 없는 세계경제시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무리 우수하다 해도 국제표준이 요구하는 문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제품은 국제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WTO/TBT 협정하의 무역환경이다. 표준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표준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관련 문서를 구비하였는가 국제 무역의 기본요건이 되는 시대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은 정부와 산업체가 합심하여 세계 무역경쟁에서 자국산업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표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체제에 돌입한지 오래이다. 전략적 표준화라는 용어로 기업 활동을 글로벌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은 그들의 주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체는 그들의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출

선이 지정하는 국가의 기술기준과 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표준(Korea Standard)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KS를 적용하여 수출하는 제품은 거의 없는 반면에 선진국은 그들의 제품 대부분을 자국의 국가 또는 단체 표준을 적용하여 수출하는 것이 관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1995년에 발효된 WTO/TBT 협정은 「단일의 국제 표준(International Standard)을 적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그 국제표준을 기초로 자국의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은 제정하면 국제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요지이다. 이러한 배경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선진국은 자국의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향후에 필요한 국가표준을 국제 표준에서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것을 국제표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표준화정책을 혁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자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등 5개국 정도라는 것이 통설이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세계 3대 경제 축의 하나로 자처하고 있는 일본의 기술력도 독자적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레벨에 못 미쳐 상기 5개국의 표준을 취합하여 자국의 것으로 제정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KS의 대부분이 일본공업규격(JIS: Japan Industrial Standard)을 번역한 정도인 우리의 기술력에 준하여 한국표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에 지나지 않다고 감히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국인은 어렵다」 또는 「한국인이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표준은 경제 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다. 우리 주위의 제품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것이 표준이므로 국제표준의 골격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을 타국에 위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국제표준에 대한 정의를 유럽은 IEC/ISO 등 국제표준화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적인 표준(De Jure Standard)을, 미국과 일본은 시장의 요구에 준하여 관련 단체에서 발행하여 범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국제표준으로 정의하여야 한다고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3. WTO/TBT 협정과 문제점

#### 가. TBT 협정의 의의

1947 GATT 규정은 기술기준과 표준(Technical Regulation and Standards)에 대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국제무역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된 GATT 워킹그룹에서 수입업자가 직면한 비관세 장벽의 가장 큰 범주가 기술장벽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수많은 협상을 거쳐 1979 토쿄라운드에서 GATT의 32개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ies)가 기술기준,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이 신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WTO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협상이 된 것으로 도쿄라운드에서 Standard Code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로써 표준(Standards)과 기술기준(Technical Regulation)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의되었다. 즉, 표준과의 적합성은 자율적인(Non-Mandatory) 반면에, 기술기준과의 적합성은 당연히 강제적(Mandatory)이다. 만일 수입된 제품이 적용된 표준에는 적합하나 관련된 기술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입국가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표준의 경우도 비투명 배타적(Non-Transparent and Discriminatory) 적합성 평가절차는 보호주의자의 효율적인 활용도구가 될 수 있다.

TBT협정(Standard Code라고도 함)은 국가의 기술 기준과 표준의 차이로 빚어지는 무역에 대한 방해물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이다. 표준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한 표준이 생산자나 수출업자의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다양한 표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심각한 비용상승을 초래한다. 표준을 전횡적으로 설정한다면 보호주의의 증거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역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TBT협정은 너무 많은 다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국제표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주어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의 요건에 충족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여도는, 국제표준과 적합성 평가 시스템이 생산성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전폭적으로 인정되었다. 국제표준을 적용하면 WTO 각 회원국의 잠재적 시장접근 장벽을 진실로 감소시키고, 마찬가지로 제 삼국시장으로의 수출에 대한 잠재적인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이다.

#### 나. TBT협정의 문제점

TBT협정의 본문 2.4에 “기술기준에서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과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 나라의 기술기준의 기초로 사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국제표준이란 용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의가 된 바가 없고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동안 엉거주춤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 하면 유럽은 TBT협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Body)가 발행하는 표준으로 해석하나 미국이 이러한 유럽의 국제표준 정의에 동의를 아니하기 때문이다.

TBT협정은 한마디로 국제표준을 적용하는 길만이 국제무역을 촉진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실질적인 도구(Tool)임은 누구나가 인정하면서도 국제표준을 어느 기술에 바탕을 둔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간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기관은 거의가 유럽에 있다. 즉 제네바에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맹(ITU), 그리고 비엔나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유럽표준화기구(CEN)와 ISO가 비엔나협정을, 유럽전기기술위원회(CENELEC)와 IEC가 드레스덴협정을, 각각 제휴하여 유럽에 기초한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실행한다는 전략 하에서 적극적이다.

이와는 다르게 미국은 지금까지 국제표준을 세계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에 바탕을 두는 이른바 De Facto Standard론을 주장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기계학회(ASME)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코드는 이미 60개국 이상에서 사용 또는 국가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증거로 제시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보급이 많이 된 미국표준을 채택하여 국제표준으로 정의하면 국제표준 개발 비용도 절감하고 실효성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당연히 미국의 관련 표준들이 국제표준이 되므로 미국 기술에 의한 상품수출 증가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미국 상무부는 결론을 짓고 있다.

## 다. 자유무역의 첫 걸음은 상호인정

자유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교역상대국간의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이다. 국제간의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한 국가에서 검사된 상품을 상대국에서 재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용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상호인정의 연장선상에 자유무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국가가 상호인정 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이 자유무역의 첫 걸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상호인정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들, 즉 전기, 기계, 화학, 의약, 의료기구, 건설재료 등을 대상으로 각국이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시행하여 왔던 안전규제를 상호 수용하면 이중규제를 회피하게 되어, 이로 인해 무역에 걸리는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비용과 시간의 절약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되었던 메이커나 수출자의 불안감과 예측 곤란하였던 문제점이 경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쌍방이 합의하는 것이 상호 인정 협정이다.

TBT협정의 제6조에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 평가의 인정과 MRA의 권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구가 6.3의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자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한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기꺼이 개시할 것을 장려한다」 이다.

대표적인 예가 2001년 12월 7일 중국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총국(AQSIQ)과 중국 인증승인국(CNCA)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필수제품인증시스템(CPCS: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System)이다. 이것은 WTO에 가입한 중국이 TBT협정을 비롯한 국제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시행하려는 규제 방침의 공포이다. 총 19개의 범주에 132개 제품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발표한 조달 방침으로 기존의 장성마크(CCEE)와 수입 품질허가마크(CCIB)를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로 통합키로 한 것이다. 2002년 5월 1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1년간 기존 제도의 이행기간을 거쳐 2003년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경제산업성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들 제품에 대한 MRA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4. 유럽연합국(EU) 내의 상호인정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미국의 경제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유럽 단일의 경제권 형성”이 최선이라는 공감대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 나라가 로마에 모여서 이른바 “로마협약”(1957)을 체결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 사람(Person)
- 자본(Finance)
- 서비스(Service)
- 상품(Goods)

등 4개 사항을 협약국내에서 국경 없는 자유이동이 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 자본, 서비스는 자유이동에 커다란 장벽이 없었으나, 상품에 있어서는 각국의 기술기준 및 표준이 서로 달라서 자유이동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 주요원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 공용의 목표로 제정된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이 자기 나라의 기술기준과 표준에 일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해도도 낮아서 적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의 타개책은 우선 유럽위원회(EC) 각국이 공용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1985년 5월에 기술 조화(調和)와 표준에 대한 새로운 시도(New Approach to Techni-

cal Harmonization and Standards)라는 협약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이전의 것을 Old Approach라고 하고, 그 이후를 New Approach로 구분한다.

New Approach는 EC 내의 상품에 대한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을 조화시킨다는 목표로, 전기와 관련된 상품의 유럽단일의 표준개발을 관장하는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Commission d'Europeene Normalisation ELEC trotechnique), 그밖의 공산품에 대한 유럽 단일의 표준을 개발하는 유럽표준화위원회(CEN : Commission d'Europeene Normalisation)를 창설하였다. 여기서 발행한 표준을 유럽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IEC 및 ISO 표준으로 채택되게 하여 유럽의 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기준으로 세계화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 첫째 목표가 상품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법령으로서 고시(Directive)라는 이름을 붙이고, 1989년부터 현재까지 21종의 상품에 관한 "새로운 시도의 고시(New Approach Directive)"를 제정하였다.

New Approach 고시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 제정되고 있다.

- EC 내에서 완전한 강제규정(Mandatory)이 되도록 하며 기존의 각국의 기술기준은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 고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 안전을 목표로 하는 필수안전요건(ESR : Essential Safety Requirments)만을 정의한다.
  - 고시 관련 대상제품은 그 고시의 모든 필수안전요건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성평가절차(CAP: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를 규정한다.
  - 대상고시에 관련되는 모든 제품은 CE 마크를 소지하도록 하여 EC 내에서 자유이동을 보장한다.
- 위의 4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제정되는 고시의 공통적

〈표 1〉 새로운 시도(New Approach)의 고시 목차

범위 및 정의	(Scope and Definition)
시장감시	(Market Surveillance)
필수안전요건	(Essential Safety Requirements)
자유이동	(Free Movement)
적합성 평가절차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인증기관	(Notified Body)
CE마크	(CE Marking)
세이프가드 규칙	(Safeguard Clause)

인 목차는 표 1과 같고, 제목도 통일된 양식(Format)에 준하여 부여하였다.

## 5. 유럽연합의 표준 전략

### 가. 유럽 표준

유럽은 국가마다 KS와 같은 공업표준이 있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BS, 프랑스에는 NF, 독일에는 DIN이 있는데 이들 국가가 유럽 경제의 3대 축이고, 그들의 표준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가 자기의 표준만을 적용할 것을 고집한다면 유럽역내에서 자유로운 물류의 실현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고 유럽 시장을 통합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모든 국가의 표준을 정리 통합하여 유럽 단일의 표준을 책정하는 것이 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것의 주축이 되는 것이 유럽표준화기구(CEN)와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이다. 각각 1965년에 창설하여 가입국은 1998년 현재 유럽 연합의 15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체코를 더한 19개국이다.

표준의 작성방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나 국제전기 기술표준화위원회(IEC)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관계자가 위원회를 소집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하여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서 합의가 되면 유럽표준(EN: European Norm)으로 발행된다. 이미 CEN 및 CENELEC에서 약 2000의 유럽표준을 발행하였고 19개의 유럽표준화기구의 가입국은 이 유럽표준을 국가표준

으로 도입하여, 그것과 모순이 되는 표준은 폐지하거나 또는 그것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하였다.

유럽 내의 각국의 표준을 대체할 수 있는 유럽표준을 작성하는 것은 유럽 내의 자유무역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유럽표준을 그대로 ISO, IEC 등의 국제표준이 되게 하겠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하에서 ISO, IEC에서 유럽제국은 일관성있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표준작성위원회의 개최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럽연합국 내에서 개최된다. 국제표준이 유럽연합국 내에서 작성되는 것까지는 양해될 수 있으나, 주요한 것은 ISO에는 약 800, IEC에는 약 200의 표준작성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위원회 대부분의 간사의 역할을 유럽국가가 하고 있는 것이다.

간사는 국제표준의 작성을 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표준안의 내용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간사의 역할을 자청하는 국가를 보면 그 나라의 국제표준에 대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간사의 임무를 수입한 수를 나라별로 보면 ISO, IEC 합계의 상위 순으로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순으로 되어 있다. 미국 이외에는 유럽국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유럽 표준화 기관의 회원국이 ISO 간사의 61%, IEC 간사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ISO나 IEC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ISO와 IEC 표준의 결정에 아주 중요한 것은 간사국의 수와 더불어 표결권 수이다. 국제표준은 한 나라가 한 표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의 결정에 유럽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제표준의 초안을 만드는 위원회는 선진국 멤버로 구성되고, 그 초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투표도 선진국 멤버에 의해서 시행된다. ISO나 IEC의 규칙에 의하면 투표총수의 1/4 이상이 반대하면 국제표준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반대할 것 같은 나라가 감지되면 여러 측면에서 사전 교섭을 한다. 유럽은 이러한 일을 당연한 처사로 생각하

여 설득을 하는 것 같다.

## 나. 유럽 표준화 기관과 국제 표준화 기관의 제휴

유럽 표준화 기관에는 비엔나협정과 드레스덴 협정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비엔나 협정은 1991년 ISO와 CEN 사이에, 드레스덴 협정은 1996년 IEC와 CENELEC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으로 두 협정 모두 1998년부터 발효되었다. 두 협정의 내용은 비슷하므로 비엔나협정을 예로 들어보자. ISO와 CEN이 일정의 조건하에 합의하면, CEN 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안을 그대로 ISO의 표준초안으로 취급하여, ISO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CEN과 병행투표(Parallel Voting)에 부쳐서 유럽표준이 곧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유럽표준화기관에서 만든 표준 초안에 대한 특권적 취급을 인정하여 그대로 국제표준으로 마무리 짓는 바이패스를 만든 것이다. 국제표준의 제정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각국의 이해관계자가 기술적인 의견을 진술하면 그것을 국제표준 초안에 반영시키는 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비엔나 협정을 적용하면 유럽 이외의 ISO 멤버는 최종 투표만 할 수 있고, ISO 초안에 대한 심의에는 원천적으로 참여가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협정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유럽 이외의 선진국이 반발하고 있으며, 지금도 비 유럽국가 등이 유럽의 특별 지위를 인정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는 있지만 협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추세로 이끌어가지 못하여 이들 협정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표준화 정책

유럽의 표준에 대한 전략은 명확한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6년 유럽집행위원회의 성명(Communique) 「표준, 인증분야의 대외 무역정책」에서 '최근 표준과 인증의 문제가 유럽의 대외 무역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각 분야에 한층 더 외향정책을 추구 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유럽의 방법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이와 모순 되지 않는 표준과 규제방법을 유럽의 무역상대가 채택하도록 추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를 중요시하여 1996년 유럽위원회의 성명인 「표준화와 글로벌 정보사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표준화는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기술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통일시장의 유효성과 유럽 산업에 대한 경쟁력의 근원이 된다.
- 유럽기업이 정보통신 기술을 표준화하는 국제적 포럼에 참가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럽기업이 정보화 정책 프로세스의 최전선에 있도록 한다.
- 표준화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EC)는 산업계의 대표자에 의한 고위 정책그룹을 조직하여, 전략적 레벨에서 표준화를 감독하고, 사업에 필요한 표준화의 중요한 요구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와 같은 방침하에 휴대전화의 유럽표준(GSM)이 세계표준이 된 것은 유럽 전략의 전형적인 성공사례이고, 유럽의 디지털 통신의 표준을 세계가 수용함으로써, 이동체 통신의 선도자 역할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일에는 3만 명, 유럽 전체로는 약 10만 명의 고용창출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자국의 표준이 국제표준이 되면 자국의 경제와 고용 정책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는 본보기이다.

## 라. 유럽연합국의 개발도상국 표준전략에 대한 각국의 지원

유럽은 표준을 수단으로 세계시장의 확보에 우위를 점 유한다고 하는 전략하에 발전도상국에 대하여 각종의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이 최근 국가표준을 정비함에 있어서 독일표준협회가 독일산업표준(DIN: Deutsche Industrie Normen)이 중국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독일의 모 전기기기 메이커는 지금까지 사내의 비밀문서로 분류되던 노하우가 담긴 사내 표준을 제공하여 자사의 제품 표준이 중국의 국가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배경은 중국이 정비하고 있는 국가표준에 독일표준이 채택되면 독일의 산업계가 중국과의 수출입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서 교역 증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용접기술 훈련소를 설치하고, 독일표준(DIN)에 기초한 용접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용접방법에 대한 표준은, 세계의 2대 조류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표준, 다른 하나는 미국용접협회(AWS: American Welding Society)의 표준이다. 일본의 JIS와 우리나라의 KS는 미국의 것을 기초로 하였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미국의 표준을 준용 또는 기초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표준을 준용 또는 기초로 하는 국가가 다수이지만, ISO표준은 독일표준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용접표준은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다. 독일은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장래의 거대시장인 중국에 열심히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중국에는 AWS, JIS도 사용되고 있어, 중국의 용접기술이 독일방식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용접이 모든 플랜트 구조물(Structures)의 건설에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기업이 중국으로 플랜트 수출을 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우수한 용접기능사가 있지만 중국에 제품 또는 플랜트를 수출하려면 다시 ISO 표준에 준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

(다음 호에 계속)